

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. 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온 가축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가축분뇨 수집·운반대행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 시에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2(가축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)의 개정
- 나. 가축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
- 다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재정비

3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접수사항 1건 있음.(별첨)

4.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붙임 : 가.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 조례안

나, 친구조문대비표

다. 기타참고사항 (관계법령 및 공문)

라. 의견제출 및 처리 내역

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"를 "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법 제8조의 규정에"를 "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"로 한다.

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"제3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3항에 따른"으로 한다

제5조제1항 중 "제28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28조에 따른"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.

제6조 중 "제26조 제4항의 규정에"를 "제26조제4항에"로 하고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상당하는"를 "해당하는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"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"을
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"으로 하고
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
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(제6조 관련)

부과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
	배출신고 대 상 별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
100리터당	허가대상	900	200	1,100
	신고대상	940	150	1,090
	신고미만	970	110	1,080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「 <u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 <u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
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) ①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	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) ① ----- -- 「 <u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8조에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)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4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) ----- ----- ----- 제3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
제5조(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대행)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는 가축분뇨 수집·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< 신 설 >	제5조(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대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제28조에 따른 ----- ----- ②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제6조(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·징수)	제6조(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·징수)

현행	개정안
수) 시장 및 대행자는 법 <u>제26조 제4항의 규정</u>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.	수) ----- <u>제26조제4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7조(사용료 납부방법 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<u>상당하는</u> 현금 또는 유가증권(보증보험 포함)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③ (생략)	제7조(사용료 납부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수수료의 감면)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「 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</u> 」의 <u>규정에 의한</u>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: 면제 3. (생략) ② 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수집·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	제8조(수수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「 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 」에 따른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관계법령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6조(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수집·운반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·운반하게 할 수 있다.

②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③수집·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수집·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,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입법예고 결과

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 통지

제 출 의 건	검 토 결 과	반영여부
<p>1. 축산 선진국과의 FTA협정 체결 후 우리축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축산농가에게 과중한 비용부담</p> <p>2. 정부의 축산업 허가제등 축산법의 개정이 축산농가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후에 지자체에서 나서도 충분함</p> <p>3. 지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정신적, 물질적으로 힘든 시기에 추진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야기</p>	<p>○ 2010. 7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산정용역결과로 수수료를 현실화율(적정비용)대비 80% 이내로 연차적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</p> <p>○ 2001년부터 물가, 유류비, 인건비 상승 등 외부적인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는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.</p> <p>○ 2011년에 인상되는 수수료는 9%로 현실화율에 64%이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 것으로 금번 인상은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함.</p> <p>○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정조례가 시행 되기전에 완료 예정임(축산과)</p>	미반영